

#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박현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1
----------	------

제안일자 : 2019. 09. .

제안자 : 박현철 의원, 동희영 의원,  
이은채 의원, 황소제 의원,  
주임록 의원, 임일혁 의원,  
이미영 의원, 방세환 의원,  
박상영 의원, 현자섭 의원 (10인)

1. 주 문 : 붙임 “결의안” 과 같음

## 2. 제안이유

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 시행은,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조치임

나. 39만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우리 광주시의회는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결 의 안 : ‘붙임’

##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아베 총리의 독단과 독선의 경제침략이 계속되고 있다. 아베정부는 지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에 이어, 8월 28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부정 등 자국의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에 위협과 질시를 가하며 양국 평화번영을 위한 신의를 저버리는 처사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조치다.

첨단산업의 핵심소재 규제에 이은 경제보복 조치 결정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그간 아베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 정부의 수출 통제제도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아베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에서 출발한 위선적이고 치졸한 행위는 양국의 경제산업 및 한·일 우호관계를 근간으로 한 항구적 동아시아 평화체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광주시의회는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여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며, 아베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추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아베정부는 한일양국간의 신뢰와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언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번 아베정부의 경제 보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제품의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 9. .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 일동